社 說

대학정책 과거로 후퇴하는가

—공안기류 편승한 교육부 공문을 보며

선선한 바람과 함께 2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 못지않게 서강대 박홍총장의 매카시적 발언, 몇차례의 간첩단 사건, 강의 내용을 담은 책자에 대한 이적성 시비, 3백만 독지를 자랑하는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테러위협등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현대판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렸던 계절이기도 해서 문민정부를 지향하는 형식적인 틀마저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비단 박홍이라는 한 대학 총장의 말로 인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이의 눈과 귀가 한사람의 입에 집중되어 있던 시간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빚어진 과거 권위주의 사회로의 퇴행조짐을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우리 사회의 경직성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역사는 한 사회가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력적이고 넓은 포용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물이나 정권의 교체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군인들의 통치를 끝내고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권초기의 신선한 개혁 이미지는 우리사회 구성원들, 특히 지난날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폭력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에 좌절감을 느껴온 지식인들에게도 많은 희망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이 오랜 시간동안 눌려오는데 익숙해진 대학사회에 경쟁의 바람을 일으켰고 한편으로는 낡은 제도와 사고의 개혁 신드롬까지 불러 온 것을 기억한다면, 현재 때마침 불어닥친 공안분위기와 발맞추어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막 조성되고 있던 대학의 자율성 확립이라는 면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난달 5일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몇차례의 공문은 그러한 면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학신문의 광고, 편집운영에 대한 통제강화, 자판기·식당등 수익사업에 대한 직접관리,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 회장에 대한 자격과 선출방식에 대한 규제강화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육정책은 저급까지 그토록 차별화 하고자 했던 5, 6공의 대학정책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대학신문과 학생회는 대학의 자치조직이다. 우리가 여기서 자치조직임을 강조하는 것은 대학신문이나 학생회의 활동은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의 평가와 비판속에서 검증되는 것이지 결코 제도의 잣대로 구성되거나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내용에 보면 대학사회에 대한 자율성의 침해정도가 이미 지난 몇년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대학신문의 광고수입이 학생회로 유입되고 있다는 발상이나,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장의 선출에 자격요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말들은 정부가 국민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지난 시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특하나 얼마전 경상대 교수들의 공동집필서인 '한국사회의 이해'가 출판된지 몇해가 지나 새삼스럽게 공안당국의 심판대에 올려진 것은 현재 지식인 사회에 대한 권력의 통제의도가 단순히 학생들의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학생은 물론 교수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집필활동, 그리고 강의내용까지도 적당한 척색 공포증의 광범위한 유포아래 제단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비춰진다.

우리는 대학에 대한 자율화 정책이 단순히 학생선발권에 그친다고 보지 않는다. 교육당국은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재량권은 적당히 남겨주고 그것이 대학자율화의 모든 것이라고 생색을 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대학의 다양한 욕구와 가능성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난 30여년간 대학이 권위적인 정권 아래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로 인해 부지불식간 권력의 경직성 못지않은 또다른 경직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길수록 보수화되고 정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기성사회에 대학의 창조적인 문화를 수혈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면 현재로서는 대학이 제 역할에 충실치 못한 것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대학이 제 역할에 충실치 못하다는 것이 권력의 대학 길들이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저항의 논리와 문화에서 더욱 더 창조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집단으로 대학이 변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학구성원 스스로의 몫이자 권리여야 한다. 최근 각 대학의 구성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혁신의 모습들은 지난 시절에 쉽게 볼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기억한다면 현재 교육당국의 타율규제강화의 움직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교육당국에서 강조한 학생회 조직과 대학언론에 대한 경고성 말언들을 철회 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현 정부를 이루는 주체들이 지난 30여년간 대학 못지않게 자율이 강조되는 사회와 권력의 폭력성을 누구보다 지적해 온 것을 떠올린다면 결코 독선에 빠진 철부지들의 아집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날 중세의 캄캄한 어둠을 밝히고 역사의 전진을 가능케 했던 대학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절대적인 권력의 휘둘림 속에서도, 휴머니즘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끝끝내 일궈낸 대학의 역사를 뒤돌아 본다면 지금의 비이성적인 모습들은 속히 사라져야 할 일이다.

대학은 비판의 역할과 함께 세계를 창조해 가는 가장 역동적인 사회조직이다.

하지만 지난 시기 권위적인 권력하에서의 오랜 골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금, 대학에 대한 통제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조처임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명예회복 "의견일치" 방법론엔 "큰차이"

"사법부가 판단할 일" 여론 가라앉기 기대 학교측

"학원탄압-공안조성 조작극" 정면대응 방침 총학생회

"안재구씨 주사강의" 검찰 발표 둘러싼 시각

우리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했던 안재구씨가 강의시간에 주체사상을 강의했다는 안기부—검찰의 발표가 2학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것은 언론이 대학에서 주체사상이 강의된 것을 문제삼는 동시에 안씨의 임용과정에서 총학생회의 추천권에 초점을 맞춘데 한 원인이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시간강사 임용에 총학생회의 관여를 연급하면서 "대학이 학생회에 끌려다니고 눈치나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학교측과 총학생회의 시각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론에서는 일치를 보지만 파문을 수습하는 방법론에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 같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기승을 부리는 공안정국에서 학교측은 파문이 확산되지 않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분위기다. 유승희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은 안씨 사건을 본보가 기사화하는 것도 '학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검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유처장은 "시범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유 처장은 또 안씨가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91년 2학기부터 강의한 사실을 근거로 조작을 주장하는 일부 여론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착오인 것 같다. 91년부터 강의를 했다면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93년부터 3학기동안 강의했다는 검찰발표는 93년도에 작성된 서류를 보고 잘못 안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학생회는 안재구씨 사건을 학원 탄압을 위한 조작으로 규정짓고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총학생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언론을 극렬히 비난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측이 사건을 덮는데 급급한 인상"이라며 학교측의 묘비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석방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의 대응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일을 빌미로 정책결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각론이다. 현재 정규 교수 임용시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총학생회에서 제안하여 개설된 교양과목에 한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가 시간강사를 추천하는 정도이다. 교수 임용에 관하여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모색해온 총학생회는 오히려 안씨 사건을 계기로 교수 임용 절차의 공개성, 엄격성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8월20일 교수추천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교무처로 보냈다. 공개 질의서에서 학자주는 "엄정한 심사없이 총학생회 추천만으로 강사를 선정했다면 학교의 직무유기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구씨 강사 선정을 두고 총학생회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자격없는 재야인사를 학생회의 압력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언론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8월18일자 기사중 '교무처 관계자는 "총학생회 산하의 교양과정심의위원회가 좋은 강사가 있다고 건의하면 대부분 발령을 내왔다"며 "안씨가 3학기 내내 시간강사로 임용된 것은 총학생회가 추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안씨가 권위있는 수학자이고 따라서 강사 선정 그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는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별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총학생회의 추천권을 과장 보도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못박은 것은 총학생회의 행동 반경을 좁힐 수 있다.

총학생회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교무처장 명의로 학자추 위원장에게 발송된 답변서에는 90년도 공영일 당시 부총장과 교심위 사이에 합의된 교수추천에 관한 사항 등 핵심자료가 빠져있다. 유승희 교무처장은 "학교 서류는 함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 처장은 또 "총학생회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합의된 문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PD계열로 분류되는 총학생회가 NL계열의 전 총학생회로부터 문건을 잘 이월받지 못한 문제와 관련돼 주목되는 부분이다. 책임이 전 총학에 있든 지금의 총학에 있든 이런 문제가 총학의 시위를 제약하는 하나의 실례로 불거져나온 것이다.

총론은 학문·사상의 자유, 대학의 자율, 공안정국과 관련한 문제다. 여기에는 이번사건을 정부와 언론이 공안정국의 기류를 타고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회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총학생회의 이런 시각은 서강대 박홍총장의 주사파 발언을 계기로 정부와 언론이 합작하여 공안관련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의 결과다. 방학중에 교육부가 각 학교에 학사활동을 강화하고 학생회의 수익사업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총학생회는 5일부터 1주일간 '학문사상의 자유 수호기간'을 정해 경상대 장상환 교수등이 쓴 '한국 사회의 이해', 안씨가 쓴 '철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 고교생 대상 의식잡지 '새날 열기'등을 판매하고, 박홍총장 고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총학생회의 추천만으로 적절한 심의 과정 없이 강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당시 학교측과 총학생회의 역학구도와는 관계없이 학교측이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책임소재에 집착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는 의견도 있다. 공안당국의 '작품만들기'를 두고서 책임을 따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학생회 활동이 위축되고 대학의 자율이 후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명수 총학생회 예결산심의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학은 시설 좋은 고등학교 같다"고 말했다. 대학이 학문—사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중석 記者〉

인 터 뷰 안재구씨의 차녀 소영씨

"아버지는 청년을 사랑하시는 분"

91년 2학기부터 지난 6월14일 '구국전위'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우리 학교에서 '현대사회와 과학'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한 안재구씨는 지금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의 차남 영민씨(경북대 87학번)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 상태다. 지난 학기만해도 1백명이 넘는 학생들이 안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학교측은 안씨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안씨는 가족 외에는 접견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안씨의 차녀 소영씨(서강대 86학번)를 지난 2일 녹번동 어느 찻집에서 만났다.

—하루하루가 힘들 것 같다.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와 동생 면회를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간다. 저녁에는 학원 강사로 나간다.

—아버지와 동생이 간첩혐의로 구속됐는데.

=검찰은 철도—지하철 파업이 한창일 때는 아버지께서 노동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더니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 이후에는 한총련을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동생은 91년도에 수배를 받았으나 해제되어 올해 복학했는데 같이 잡아들였다. 정북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전대협 동우회에 들어있는데, 한총련을 조종하는 것으로 짜맞추었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도 청년을 사랑하는 분이셨다. 청년들과 함께 있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다.

—남민전 사건으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셨고 다시 간첩혐의로 구속됐는데 주위 반응은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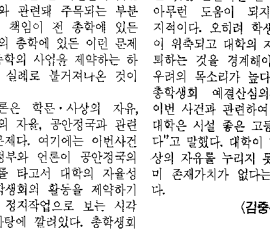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워졌고, 격려를 해주는 분들도 많다.

—아버지께서 나오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소영씨는 '구국전위'사건을 다룬 (월간조선) 9월호를 보고는 놀라며 몸을 심하게 뒤로 젖혔다.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에게는 감찍할 수밖에 없는 기사를 기자가 불쑥 내밀었기 때문이었다. 소영씨는 그러나 인터뷰 내내 차분하게 답했으며 서너 번 웃어보이기도 했다.

(고) (황) (만) (평)



"신공안선 풍경"

POSCO 메세지 개강편

"빈 만큼 채워야지…"

캠퍼스로 돌아온 우리들눈에 모든것이 한뼘씩아나
커져 있었습니다.
늘상 우리에게 그늘보 토론의 장소를 제공하던 히말라야 삼나무 —
고색 창연한 붉덩물로 뒤덮여 있는 학생회관 —
배낭 여행이나, 아르바이트다 하여 한층 성숙된 모습의 학우들 —
한뼘씩, 한뼘씩 커진만큼 비어 있는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전보다 더한 자아성찰과 노력으로 채워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휘머리가 더욱 느신 교수님의 쾌거이린 강의를 들으면서 —
그 변자리 만큼은 우확인 우리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
진리가 곧 우리들 자유롭게 할것이라는 기대어린 희망을
학장을 넘길때 가져봅니다.
흔들을 아껴 학문에 정진하는 예지인이 되기위해
미래의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빈만큼 채우는 지혜 —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나, 도서실에서나 어디서든지……

포항제철